

## 앞으로 불합리한 수수료는 저축은행이 내는 걸로~

“은행이 수익을 얻으려고 대출을 해주는 건데… 신용을 조사하고 담보 가치를 평가하는데 드는 돈, 왜 고객이 다 부담하나요?” C씨는 OO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저렴한 이자에 기뻐한 것도 잠시, 이자 외에 신용조사수수료와 대출취급수수료 등을 추가로 내란 말에 화가 났습니다.

전에는 고객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이자 외에 대출취급 수수료, 담보조사 수수료, 담보변경 수수료, 신용조사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이 수수료들은 고객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비용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게 타당합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이런 불합리한 수수료 수취 관행이 말끔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 저축은행 이용 고객의 연 1,000억원의  
수수료 부담 감소(추정)



대출취급수수료, 담보변경수수료, 담보조사수수료, 기성고확인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 6개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

개선 후

6개 수수료 부과 근거를 삭제해 고객으로부터 불합리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함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개정 (금융위, '14.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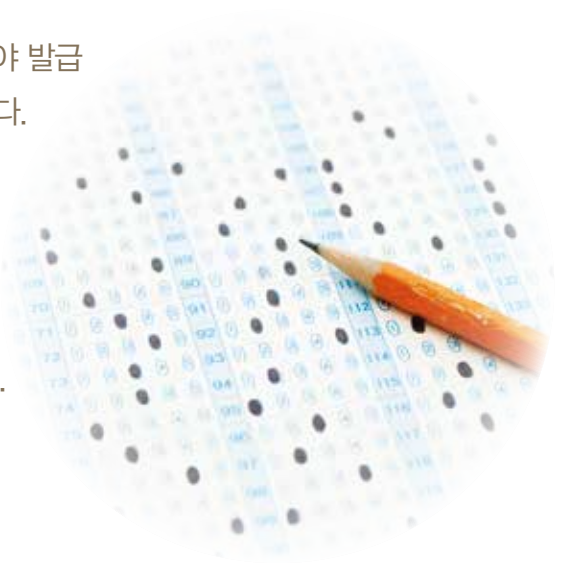
# 112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확인서 무료 발급

## 합격해서 좋고, 수수료 없어 더 좋고!

“접수확인서, 응시확인서는 무료인데 왜 합격확인서만 돈을 내야 발급 되나요?” 정보통신기사 시험에 합격한 C씨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합격확인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스템 전산화로 발급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합격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없애고 기술자격 취득자들의 편리를 늘렸습니다.



- 연 18만여건의 발급 수수료  
(약 1억8,000만원) 면제



### 개선 전

국가기술자격 시험 합격확인서 발급 수수료 1,000원

### 개선 후

**국가기술자격 시험 합격확인서 무료 발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고용부, '14.6월)

## 재혼가정 아픔 덜어내는 규제개선!

재혼을 한 C씨는 지난해 남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데려온 자녀가 남편의 부양자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딛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C씨는 자신의 자녀가 한 가정의 공동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생각에 맘이 아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혼가정의 자녀는 실질적인 부양자녀임에도 이 조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부양자녀 요건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되도록 규제를 개선해서 재혼가정의 고충과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 재혼가정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확대로 가족 일체감 강화



### 개선 전

부양자녀의 판정기준은 거주자의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로 함.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부양자녀에서 제외

### 개선 후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자녀에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국세청, '14.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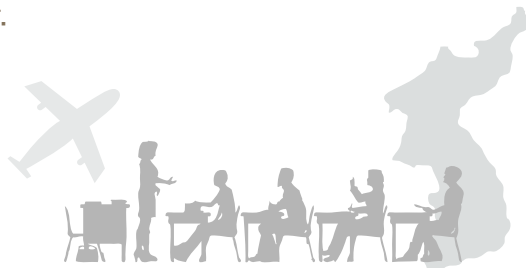
# 114

외국인 유학생, 국내에서 한국어 이외 외국어 연수 가능

## 한국으로 어학 연수 오세요!

미국 유명대학의 한국 분교인 N대학엔 학생들의 영어연수과정 입학 문의가 줄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N대학은 이들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한국어 연수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 까닭입니다.

국내 외국인 교육기관은 이제껏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영어 등 기타 외국어 연수 과정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어와 영어 등 외국어를 결합한 어학연수 프로그램도 허용했습니다. 외국 유명대학의 한국 분교 설립이 늘며, 한국에서 외국어 연수를 하려는 아시아권 유학생의 국내 유입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어 연수 희망자뿐만 아니라 영어 등 외국어 연수 희망자까지 국내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외국인 어학연수생 증가 : (2013년)21,381명  
➡ (2014년11월)24,695명



### 개선 전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 연수만 가능

### 개선 후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 연수, 영어 등 외국어 연수, 한국어와 외국어가 결합된 어학연수도 가능**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개정 (법무부, ’14.4월)

문의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7)

## 요즘 대세 해외 직구! 반품도 일사천리!

“돌려받는 세금에 비해 통관수수료가 더 비싸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대학생 Y씨는 겨울 코트를 더 싸게 사려고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코트를 받아보니 생각했던 재질과 달라 반품하려 했지만 번거로운 일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고, 관세사에게 환급 절차를 의뢰하다보니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시간도 날리게 됐습니다.



Y씨 같은 해외 직구족들의 고충이 풀렸습니다. 해외 직구 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 심사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 및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바뀐 것입니다. 이로써 관세 환급이 손쉬워지고 불필요한 통관수수료 부담도 해소됐습니다.



### • 관세 환급 절차 간소화로 국민 편의 증진



#### 개선 전

단순 변심은 관세 환급 불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수출업체만 직접 수출신고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개인은 관세사를 거쳐야 함

#### 개선 후

해외 직구 시 단순 변심도 관세 환급 허용  
개인의 경우에도 직접 수출신고 및 환급신청이 가능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 '14.7월)

## 인감증명서 서류 하나 줄였을 뿐인데 이렇게 편리하다니!

‘신분증이야 사고 명의자에게 요청해 빌리거나 복사 할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는 직접 본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하잖아요. 왜 이렇게 귀찮은 규제를 놔두는 거죠?’ 보험 설계사 K씨는 불만스럽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선 사고명의자를 대신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대리 처리해주는 일이 많은데, 이때마다 인감증명서를 챙기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아무 효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행정서류를 대신 처리하는데 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K씨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K씨의 불편이 사라졌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대리발급 받을 때 본인의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도록 규제가 풀린 덕분입니다. 보통 교통사고로 정신없는 상황에서 사고 명의자가 서류까지 챙기긴 힘듭니다. 이젠 사고 당사자와 보험업 종사자가 더 편리하고 빠르게 사고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 연 2만7,000여건, 9억1,000여만원의 인감증명서 발급비용 절감 및 국민편의 증진 기대



### 개선 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발급 시 본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 개선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발급 시 본인의 인감증명서는 별도로 필요 없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법제심사 중 (경찰청, '14.12월 예정)

## 특기 의경 신청, 인터넷으로 OK!

“가득이나 바쁘고 정신없는데 경찰서까지 가려니 불편합니다.” 이제 막 군대에 입대해야 하는 P군은 의무 경찰에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요리에 관심이 많아 요리사 자격증을 여러 개 갖고 있던 P군은 온라인 원서 접수를 하려다 황당해졌습니다. 일반 의무 경찰은 모두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는데, 요리를 전공으로 한 특기 의경은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하던 겁니다.



군복무를 위해 의무경찰 지원 시 일반 의경은 의무경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원서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운전·조리·전산 등 특기 의경의 경우엔 안내 및 자격요건 확인 등 오류방지 차원에서 반드시 경찰서를 방문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특기 의경도 온라인으로 바로 원서접수를 하게 규제를 개선해서 그동안의 불편을 없앴습니다.



- 신청자 수가 작년 대비 4배 이상 증가  
(‘13년 653명 ➡ ‘14년 2,350명)



### 개선 전

특기 의경 원서접수 시 경찰서 방문 접수

### 개선 후

**특기 의경 원서접수 시 경찰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 및 내부 관리 서버·시스템 개편 (경찰청, ‘14.4월)

# 118

부녀자 소득공제 받아도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 저소득 여성 지원 쏙쏙~ 일할 맛이 팍팍!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 했더니,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 부녀자 소득공제를 취소하러더군요.” H씨는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절감 세액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소득층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규제개선 덕택에 부녀자 소득공제와 근로장려금의 중복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아도 국세청이 알아서 절감 세액을 차감한 뒤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저소득층 지원 확대, 약 7만5,000명, 800억원 수혜 추정



### 개선 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녀자 공제를 받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음

### 개선 후

**부녀자공제로 절감된 세금 액수를 차감한 뒤 근로장려금 지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국세청, '14.2월)